「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3호(2025. 11): 105-130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9 No.3 (November 2025)
http://dx.doi.org/10.20484/klog.29.3.5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공정성 및 취업기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 예 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위(주관적 사회적 지위 등)와 정부의 질(중앙정부 청렴도) 및 공정성은 삶의 만족과 행복을 증대시키고,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이들을 감소시켰다. 또한 공정성은 일부 변수들(학력, 정부-국민간 소통 등)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변화를 유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계층 간 이동 기회 확대, 생활 안정성 강화를 통합추진하는 정책 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청렴성과 소통으로 공정하게 행정을 운영하고, 시민이 중심되는 행정절차를 설계한다. 셋째,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금전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넷째,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관리 시스템과 지역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주제어: 주관적 웰빙, 사회적 지위, 정부의 질, 공정성, 삶의 질

Ⅰ. 서론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차원(삶의 만족)과 정서적 차원(긍정·부정 정서)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이러한 주관적 웰빙은 단순히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데, 특히 Easterlin(1974)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은 상대소득, 불평등, 신뢰, 공정성, 거버넌스의 질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이 주관적 웰빙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Helliwell & Putnam, 2004; Oishi et al., 2011).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빠른 고학력화와 도시화, 디지털화 등의 변화 속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이동성의 둔화를 경험하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 정부의 질(QoG), 공정성이 주관적 웰빙의 핵심 결

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는 객관적 자원의 획득 뿐 아니라 상대적 위치 인식과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 등 심리적 요인을 통해, 정부의 질은 문제해결능력, 업무 수행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통해, 공정성은 자원 분배와 절차의 형평성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안정감, 삶의 만족감 등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주관적 웰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득·교육·건강 등 객관적 지표에 집중하여 살펴보거나, 개별 요인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 공정성을 포함하는 등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첫째,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은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와 둘째, 공정성 인식은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을 삶의 만족과 행복,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공정성을 사회적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조절효과)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필요한 주관적 웰빙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구성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적 개념으로, 인지적 평가(예: 삶의 만족)와 정서적 경험(예: 행복, 긍정·부정 정서)으로 구성된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첫째, 인지적 평가로서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다. 삶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또는 가정·소득·일·건강 등 영역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숙고적으로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Diener et al., 1985). 둘째, 정서적 웰빙으로서 '행복(happiness)'이다. 정서적 웰빙은 즐거움, 평온, 흥미 등 긍정적 정서의 빈도와 강도가 높고 불안, 슬픔, 분노 등 부정적 정서가 억제되는 상태로 정의된다(Bradburn, 1969). 이러한 정서적 웰빙은 스트레스, 건강, 사회관계와 상호작용하며, 긍정적 정서는 심리자원, 관계자본, 회복탄력성을 확장하는 경로를 통해 증대된다(Fredrickson, 2001).

2. 사회적 지위, 정부의 질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

1)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웰빙

사회적 지위는 한 개인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서열을 의미하며, 해당 위치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 평가 등을 포함한다(Weber, 1946). 이는 시장 영역의 경제적 자원(계급)이나 정치 영역의 권력(power)과는 구별되는 상징적 차원의 서열로 이해되며, 세 차원은 종종 상호 연동되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Weber, 1978). 예컨대,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직업의 사회적 평판이나 학력의 상징적 가치에 따라 인지되는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는 귀속적 요소(출신, 성별, 인종·민족, 가문 등)와 성취적 요소(학력, 직업, 소득, 공적 성취 등)가 결합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주관적 사회적 지위와 객관적 사회적 지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사회적 지위(Subjective Social Status, SSS)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 등 주관적 웰빙(SWB)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Adler et al., 2000). 즉, 동일한 소득, 학력 조건에서도 준거집단에 따라 지위 인식이 달라지며, 이는 인지적 평가와 정서 반응을 규정한다. 사회비교 이론(Festinger, 1954)과 상대소득 가설(Clark et al., 2008)에 의하면, 주관적 웰빙은 절대 수준보다 비교 격차에 의해 좌우되고, 불평등은 지위 불안과 스트레스 경로를 통해 주관적 웰빙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지위획득 모형(Blau & Duncan, 1967; Goldthorpe, 1980)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초기 직업 경험이 현재 지위를 형성하고, 지위 상승이 자원 접근성과 통제감을 높여 주관적 웰빙을 증진시킨다. 또한 기대-가치 이론(Eccles & Wigfield, 2002)에 의하면, 본인이나 자녀의 상향이동 기대가 목표지향성과 낙관성을 강화하여 주관적 웰빙을 높이고, 반대로 이동가능성이 낮으면 학습된 무기력(Seligman, 1975)이 심화된다. 그리고 Bourdieu(1977)에 의하면, 이러한 기대는 사회화와 구조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즉 세대 간 이동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삶의 만족과 신뢰가 높으며(Chetty et al., 2014), 분배공정성은 이동성과 성취의 정서적 보상 효과를 강화하고(Alesina & La Ferrara, 2005), 불공정성은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킨다.

둘째, 객관적 사회적 지위는 측정가능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대표적으로 소득, 교육 수준, 직업 지위가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Krieger et al., 1997), 이는 주관적 웰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소득은 기본 욕구 충족 구간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에 강하게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Kahneman & Deaton, 2010). 그리고 전망이론(Kahneman & Tversky, 1979)에 따르면, 손실이 동일한 크기의 이득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의 감소나 변동성 증가는 심리적 충격을 심화시킨다. 특히 준거집단 대비 낮은 소득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Clark et al., 2008),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이러한 경로를 강화하여 지위 불안과 스트레스를 높인다.

또한 주거안정성은 자산 축적과 거주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간접적으로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킨다(DiPasquale & Glaeser, 1999;

Helliwell & Putnam, 2007). 자가 보유 외에 안정적인 임대 주거형태도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재무불안정을 야기하여 행복을 잠식할 수 있다(Keese, 2012). 그리고 학력은 소득 증가, 고용 안정성, 직무 자율성 향상 등의 경제적 경로뿐 아니라, 문해력 및 문제해결력 향상, 건강 인식 제고, 사회적 신뢰 증진 등의 비경제적 경로를 통해 주관적 웰빙을 확대한다(Barro, 2001; Oreopoulos & Salvanes, 2011). 그 외에도 고학력은 기대 수준을 높여 만족의 기준선을 상향시킬 수 있으나, 제도적 공정성이 높은 경우 교육 성취의 심리적 보상 효과가 강화되어 삶의 만족과 행복이 증대된다.

2) 정부의 질과 주관적 웰빙

정부의 질은 정부권력이 불편부당하게(impartial), 규범에 따라(rule-bound), 예측 가능하게 행사되는 정도를 의미한다(Rothstein & Teorell, 2008). 이는 정부 효능감, 정책의 절차적 무결성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며, 국민의 삶의 만족(인지적 차원)과 행복(정서적 차원), 즉 주관적 웰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부의 질의 주요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 효능감(Government Efficacy)은 정부가 공공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민 인식(Niemi, Craig, & Mattei, 1991)을 나타낸다. 높은 정부 효능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안정성, 안전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여 행복을 증대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킨다(Frey & Stutzer, 2000; Helliwell & Huang, 2008). 둘째, 정부 소통(Government Communication)은 정부가 시민과 정보·의견·가치를 교환하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정의된다(Canel & Sanders, 2012). 정부소통은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시민의 자율성과 통제감을 제고하고(Tyler, 2006), 효과적인 정부소통은 시민의 참여 경험을 통해 인지적 차원(삶의 만족)과 정서적 차원(행복)의 주관적 웰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hneman & Deaton, 2010). 셋째, 정부 신뢰(Government Trust)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일반화된 기대를 의미한다(Putnam, 2000; Rothstein & Stolle, 2008). 정부 신뢰는 사회적·제도적 상호작용에서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줄여 국민의 삶의 만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촉진한다(Helliwell & Putnam, 2004).

넷째, 정부 청렴성(Integrity)은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Klitgaard, 1988). 청렴한 행정은 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제도 신뢰를 높이고, 부패로 인한 불평등과 냉소주의를 방지함으로써 삶의 만족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rsson et al., 2013). 다섯째, 행정서비스 수행의 공정성(Fairness in Administrative Service Delivery)은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 공정성[1]을 의미하며 결과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시민의 만족과 순응성, 정책의 정당성을 결정한다(Lind & Tyler, 1988; Tyler, 2006). 예를 들어, 시민이

1) 정부의 질의 요소인 '행정서비스 수행의 공정성'은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되는 제도적 공정성(institutional fairness)으로, 정부-시민 간 상호작용의 구체적 절차(예: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며, 정부 운영수준을 나타내는 투입요인이자 개별기관 수준의 공정성이다. 이는 청렴성, 정부 소통과 함께 제도 운영의 객관적·절차적 측면을 구성하는 특징을 지닌다.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중립성(neutrality), 존중(respect), 신뢰성(trustworthiness)을 경험하면 이는 시민의 자존감과 제도 신뢰를 높여 행복과 삶의 만족을 모두 증진시킨다.

3. 조절변수로서 공정성

공정성은 사회적·제도적 상호작용에서 자원과 기회의 분배, 절차, 대우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규범적 원칙을 의미한다. Rawls(1971)는 이를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도록 설계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결과(result)뿐 아니라 과정(process)의 공정성을 핵심 요소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Lind & Tyler(1988)은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만족도를 넘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중립성, 존중성을 포함할 때 개인의 수용성과 제도 신뢰를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성을 사회 전체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인지적 판단, 즉 정치·경제·교육·노동시장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평가적 인식으로 규정(Rawls, 1971; Alesina & La Ferrara, 2005)하여 조절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공정성 인식(macro-level perceived fairness)'으로 개별기관 수준의 업무과정 공정성을 나타내는 '행정서비스 수행의 공정성'과는 개념적 층위(level)가 구분된다.

즉 조절변수로서 공정성(fairness)은 개인이 사회·경제·행정 전반의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관찰하는 규칙의 일관성, 편파성의 배제, 발언 및 이의제기 기회, 존중받는 대우, 결과의 정당성 등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과 행복 등 주관적 웰빙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개인은 존중감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통제감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어 주관적 웰빙이 직접적으로 증대된다(Diener et al., 1985; Tyler, 2006). 또한 공정성은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다(Runciman, 1966). 이와 같이 주관적 웰빙, 특히 삶의 만족은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맥락에 의해 깊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첫째,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공정성의 조절효과이다. 상대적 박탈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불공정성을 인식할 때 부정적 정서가 증폭되며, 이러한 불공정성 인식과 비교의식은 분노·좌절 등의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촉진하여 주관적 웰빙을 저하시킨다(Runciman, 1966; Smith et al., 2012). 반대로 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되면 소득이나 지위의 객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되어 주관적 웰빙의 하락 폭이 줄어든다(Alesina & La Ferrara, 2005). 그리고 기대-가치 이론에 따르면 공정성이 높을수록 노력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어 계층이동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주관적 웰빙을 증진시킨다(Eccles & Wigfield, 2002).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과에 대한 개인 책임이 강조되면서 성과 유지 압박과 자기책임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Sandel, 2020).

둘째, 정부의 질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공정성의 조절효과이다. Ma et al.(2024)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정성이 정부신뢰를 매개로 웰빙 효과를 강화하는 순차적 매개-조절 구

조(serial moderated mediation)를 실증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제도적 품질 개선이 신뢰 형성을 거쳐 주관적 행복감으로 전환됨을 나타내며, 공정성이 정부 품질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효과)를 증폭하는 심리적 촉진제(psychological amplifier)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대불일치이론(expectancy-disconfirmation theory)에 따르면, 공정성 인식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정부의 질이 우수하더라도 주관적 웰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현저히 약화되거나 유효하지 않게 된다. 대표적으로 Liu et al.(2019)의 연구는 공정성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정부 품질과 주관적 웰빙의 정(+)적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 요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먼저 손주희(2018)에 의하면 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인지하며, 이를 통해 삶의 만족이 간접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경호(2021)는 사회적 신뢰가 삶의 만족과 사회적 포용성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포용성이 사회적 신뢰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 인식은 사회적 신뢰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사회적 포용성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영창 외(2025)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에 유의하게 작용하며, 디지털 적응 역량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은 삶의 만족을 높였으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이형하(2021)는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을 거쳐 삶의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문정화·강민아(2017)는 노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으며,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비취업자보다 삶의 만족이 높고, 일용직은 비취업자보다 삶의 만족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김다은 외(2024)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육, 의료,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삶의 만족이 상승하며, 환경을 경쟁적으로 인식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정부의 질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이수(2024)는 정부 및 지역 요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성·능력주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대응성, 사회 안전성과 지역 소속감이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과 능력주의도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배정현(2014)은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질(QoG)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하여, 참여 보장 제도,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등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고, 국가별로 세부 요인들의 영향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질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이 삶의 만족을 높임을 확인하였다.

박창연·이충기(2020)는 코로나19 상황에 관광산업 종사자의 스트레스와 직업불안이 직무 및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신뢰가 직무만족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점을 밝혔다. 또한 강우진(2020)은 OECD 6개국의 비교 분석에서 국가와 시기별로 영향 요인이 다양하나, 경제위기 전후 일관되게 가정의 경제조건 만족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이고,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 수행력이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의 맥락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예나(2023)는 광주 광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성, 민주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중 복지, 문화, 보육 서비스 만족도와 가구 형태, 소득 및 신뢰성과 민주성이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 또는 행복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사회적지지, 포용성, 우울, 디지털 역량 등 단일 매개 또는 조절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정부의 질과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들은 정부 신뢰, 대응성, 참여 보장 제도, 법의 지배 등 일부 제도 요인이나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구체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어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정부의 질 중 하나를 핵심변수로 설정하고, 그 외 요인들을 보조 요인으로 일부 포함·분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을 삶의 만족과 행복으로 세분화하고,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위는 주관적·객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사회적 측면의 요인들을 반영하고, 정부의 질은 효능감, 소통, 신뢰, 청렴성, 행정서비스 수행의 공정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차원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공정성을 사회적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비교·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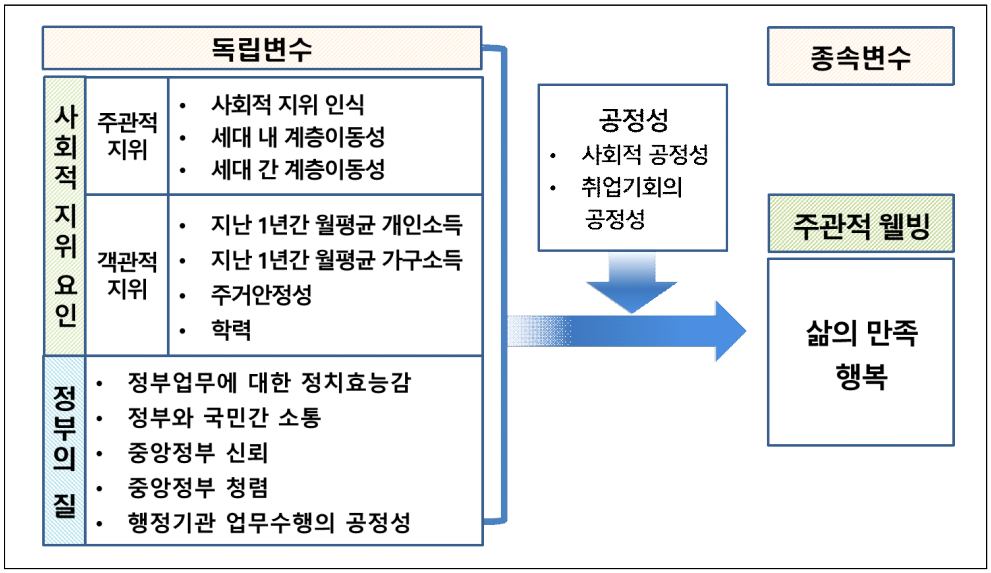
Ⅲ. 연구설계

1. 분석 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은 단순한 개인적 특성 차원을 넘어 사회·제도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도 공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로서 공정성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주관적 웰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구성요소를 삶의 만족과 행복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로 구성하고, 사회적 지위는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지위로, 정부의 질은 정부 효능감, 국민과 소통, 신뢰, 청렴성, 행정서비스 수행의 공정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요소들의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조절변수는 공정성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2. 변수, 측정지표, 자료수집, 분석방법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적 개념이다. 주관적 웰빙은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경험 두 차원으로 구성되며(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관적 웰빙의 측정변수를 삶의 만족과 행복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은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 평가 측면을 나타내며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 또는 특정 영역(가정, 소득, 일, 건강 등)에 대해 안정적이고 숙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Diener et al., 1985). 그리고 행복(Happiness)은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경험 측면으로 즐거움, 평온, 흥미 등 긍정적 정서가 높은 빈도와 강도를 나타내며 불안, 슬픔, 분노 등 부정적 정서가 억제된 상태를 의미한다(Bradburn, 1969).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로 구성되는데, 사회적 지위의 경우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먼저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개인이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주관적 웰빙(SWB)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Adler et al., 2000). 사회비교 이론

(Festinger, 1954)과 상대소득 가설(Clark et al., 2008) 등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은 절대 수준보다 비교 격차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계층의 상향 이동 기대는 주관적 웰빙을 높이지만(Eccles & Wigfield, 2002), 이동가능성이 낮으면 무기력이 심화되는 특징(Seligman, 1975)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고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개인의 노력을 통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세대 간 계층이동성(개인의 노력을 통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을 세부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객관적 사회적 지위는 소득, 교육, 직업 등 통계로 측정가능한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되며(Krieger et al., 1997), 먼저 소득은 기본 욕구 충족 구간에서 주관적 웰빙에 큰 영향을 주고, 낮은 상대적 소득은 개인에게 박탈감을 유발하지만(Clark et al., 2008),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다(Kahneman & Deaton, 2010). 그리고 주거 안정성은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Helliwell & Putnam, 2007), 학력은 경제적·비경제적 경로를 통해 주관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Barro, 2001; Oreopoulos & Salvanes,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객관적 사회적 지위의 측정지표로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안정성(주거점유형태), 학력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 지위 요인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주관적 사회적 지위 요인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객관적 사회적 지위 요인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정부의 질은 정부권력이 불편부당하고 규범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행사되는 정도를 의미하며(Rothstein & Teorell, 2008), 절차적 무결성과 집행 공정성을 강조하고 주관적 웰빙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정부 효능감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시민의 믿음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을 높이고(Frey & Stutzer, 2000), 정부 소통(Government Communication)은 정보 접근과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효용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며(Frey & Stutzer, 2005) 긍정적인 정서를 증대시킨다(Kahneman & Deaton, 2010).

그리고 정부 신뢰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뜻하며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줄여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키고(Helliwell & Putnam, 2004), 청렴성은 부패 방지, 공정한 절차 보장 등으로 제도 신뢰를 높이면서 삶의 만족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rsson et al., 2013). 또한 행정서비스 수행의 공정성은 행정기관의 업무 과정상 공정성[2]으로 결과와 무관하게 만족, 순응, 정당성을 좌우하며(Tyler, 2006), 존중과 신뢰 경험을 통해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 효능감, 정부 소통, 정부 신뢰, 정부 청렴, 과정 공정성(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고,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아래와

2) 개별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공정성으로 '행정기관이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를 나타낸다(한국행정연구원, 2024).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정부의 질 요인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절변수로 공정성을 설정하였는데, 이 때 공정성은 사회 전체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인지적 판단으로, 정치·경제·교육·노동시장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평가적 인식으로 규정된다[3](Rawls, 1971; Alesina & La Ferrara, 2005). 즉, 사회 각 분야에서 제도적 상호작용 속에 자원과 기회의 분배 및 절차, 대우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규범적 원칙으로, 결과와 함께 과정의 공정성을 포함한다(Rawls, 1971; Lind & Tyler, 1988).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성을 사회적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으로 세분화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공정성은 정치, 경제, 교육, 사법 등 제도 전반에서 개인에게 차별 없는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고 절차가 공정하게 작동된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Alesina & La Ferrara, 2005). 이러한 사회적 공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며 협력 촉진 등을 통해 삶의 만족과 행복이 향상될 수 있다(Helliwell & Putnam, 2004; Rothstein & Uslaner, 2005).

그리고 취업기회 공정성은 기회 체계 측면의 공정성으로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발전 과정에서 능력, 자격, 노력에 기반하여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개인 인식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 및 훈련 기회, 채용 절차의 투명성, 승진, 보상 구조의 공정성과 직결되며(ILO, 2019), 채용·승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수록 노동과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이 향상된다(Clark, 2011). 이러한 두 공정성은 기타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Runciman, 1966; Smith et al., 2012; Liu et al., 2019; Diener et al., 2018),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요인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공정성은 정부의 질 요인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변수와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측정방법
종속 변수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1:매우 불만족 – 11:매우 만족
			행복	1:매우 불행 – 11:매우 행복
독립 변수	사회적 지위 요인	주관적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인식	1:매우 낮음 – 11:매우 높음
			세대 내 계층이동성	1:매우 낮음 – 4:매우 높음
			세대 간 계층이동성	1:매우 낮음 – 4:매우 높음
		객관적 사회적 지위	지난 1년 간 월평균 개인 소득	1:무소득 – 12:1000만원 이상
			지난 1년 간 월평균 가구 소득	1:무소득 – 12:1000만원 이상
			주거안정성	1:매우 낮음 – 5:매우 높음

3)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공정성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나타낸다(한국행정연구원, 2024).

		학력	1:초졸이하 – 4:대졸이상
	정부의 질	정부효능감	1:매우 낮음 – 4:매우높음
		정부 소통	1:매우 낮음 – 4:매우높음
		정부 신뢰	1:매우 낮음 – 4:매우높음
		정부 청렴	1:매우 낮음 – 4:매우높음
		과정 공정성	1:매우 낮음 – 5:매우높음
조절 변수	공정성	사회적 공정성	1:매우 낮음 – 4:매우 높음
		취업기회 공정성	1:매우 낮음 – 4:매우 높음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도 한국사회통합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해당 자료는 사회통합 수준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모집단 등을 고려한 다단층화 확률비례추출방식으로 조사대상(2024년 현재 국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251명)을 설정하고,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사회 및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 사회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는바, 본 연구내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IBM SPSS Static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 정부의 질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 및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VIF가 2.0 이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정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먼저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이 어떠한 효과(조절효과)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2). 먼저 모형 1에서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사회적 지위인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 세대 간 계층이동성과 객관적 사회적 지위인 월평균 개인소득, 주거안정성, 학력 및 정부의 질 요인인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중앙정부의 청렴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인 사회적 공정성 역시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질 요인 중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모형 2는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사회적 공정성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월평균 개인소득, 주거안

정성, 학력,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중앙정부의 청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공정성, 사회적 공정성의 경우 모형1과 동일한 방향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공정성과의 상호작용항에서는 학력, 정부와 국민 간 소통과의 상호작용항이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 효과를 확대하였다. 반면에 세대 내 계층이동성, 월평균 가구소득, 정부 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표 2〉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정성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베타	t	베타	t
독립변수	사회적 지위 요인	주관적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인식	0.360	33.684***	0.360	33.506***
			세대 내 계층이동성	0.028	2.474*	0.029	2.503*
			세대 간 계층이동성	0.064	5.774***	0.059	5.302***
		객관적 사회적 지위	월평균 개인 소득	0.035	3.101**	0.035	3.086**
			월평균 가구 소득	0.012	1.035	0.010	0.881
			주거안정성	0.028	2.760**	0.028	2.717**
			학력	0.043	3.705***	0.044	3.770***
	정부의 질 요인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		0.000	0.019	0.000	-0.025
		정부와 국민 간 소통		0.040	3.341**	0.041	3.378**
		중앙정부 신뢰		0.006	0.420	0.007	0.477
		중앙정부 청렴		0.049	3.380**	0.047	3.299**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0.035	-3.308**	-0.035	-3.353**
조절변수	사회적 공정성			0.069	6.829***	0.066	6.450***
상호작용항	사회적 지위 요인	사회적 지위 인식				-0.004	-0.345
		세대 내 계층이동성				-0.036	-3.139**
		세대 간 계층이동성				-0.015	-1.357
		월평균 개인소득				-0.003	-0.304
		월평균 가구소득				-0.023	-1.964*
		주거안정성				0.009	0.892
		학력				0.024	2.072*
	정부의 질 요인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				-0.017	-1.670*
		정부와 국민 간 소통				0.023	1.889*
		중앙정부 신뢰				-0.012	-0.806
		중앙정부 청렴				-0.013	-0.918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0.007	0.630
(상수)				532.703***		521.587***	
R제곱				0.193		0.196	
수정된 R제곱				0.191		0.194	
F값 변화량				151.092***		3.042**	

주 : *p〈.10, **p〈.05, ***p〈.01

2.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정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이 정서적 웰빙을 나타내는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공정성이 이들의 관계에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3). 먼저 모형 1에서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사회 지위인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 세대 간계층이동성과 객관적 사회 지위인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 주거안정성, 학력 및 정부의 질 요인인 중앙정부의 청렴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인 사회적 공정성 역시 시민들의 행복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모형 2는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사회적 공정성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으로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안정성, 학력, 중앙정부의 청렴, 사회적 공정성의 경우 모형1과 동일한 방향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과의 상호작용항에서는 주거안정성, 학력과의 상호작용항이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 효과를 확대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와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 영향을 축소하였다.

〈표 3〉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정성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베타	t	베타	t
독립변수	사회적 지위 요인	주관적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인식	0.345	32.337***	0.343	31.907***
			세대 내 계층이동성	0.072	6.320***	0.074	6.456***
			세대 간계층이동성	0.022	2.019*	0.020	1.812*
		객관적 사회적 지위	월평균 개인 소득	0.020	1.748*	0.020	1.792*
			월평균 가구 소득	0.047	3.977***	0.043	3.672***
			주거안정성	0.030	2.994*	0.035	3.351**
			학력	0.046	3.973***	0.048	4.117***
	정부의 질 요인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		0.010	0.973	0.009	0.931
		정부와 국민 간 소통		0.007	0.559	0.005	0.442
		중앙정부 신뢰		0.002	0.140	0.002	0.108
		중앙정부 청렴		0.032	2.205*	0.032	2.215*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0.015	−1.382	−0.015	−1.414
조절변수	사회적 공정성			0.095	9.375***	0.094	9.203***
상호작용항	사회적 지위 요인	사회적 지위 인식				−0.003	−0.322
		세대 내 계층이동성				0.002	0.155
		세대 간계층이동성				−0.010	−0.882
		월평균 개인 소득				−0.007	−0.661
		월평균 가구 소득				−0.051	−4.279***
		주거안정성				0.025	2.437*

		학력			0.024	2.103*
	정부의 질 요인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			0.001	0.058
		정부와 국민 간 소통			-0.003	-0.276
		중앙정부 신뢰			0.005	0.343
		중앙정부 청렴			0.000	-0.012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0.006	0.615
(상수)			575.013		561.832	
R제곱			0.194		0.197	
수정된 R제곱			0.193		0.195	
F값 변화량			152.770***		2.348**	

주 : *p〈.10, **p〈.05, ***p〈.01

3.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취업기회 공정성의 조절효과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시적 측면의 취업기회 공정성이 이들의 관계에 어떤 효과(조절효과)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4). 먼저 모형 1에서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사회 지위인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 세대 간 계층이동성과 객관적 사회 지위인 월평균 개인소득, 주거안정성, 학력 및 정부의 질 요인인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중앙정부의 청렴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인 취업기회 공정성 역시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질 요인 중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모형 2는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취업기회 공정성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으로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월평균 개인소득, 주거안정성, 학력,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중앙정부 청렴,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공정성, 취업기회 공정성의 경우 모형1과 동일한 방향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취업기회 공정성과의 상호작용항에서는 사회적 지위 인식,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공정성과의 상호작용항이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표 4〉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취업기회 공정성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베타	t	베타	t
독립변수	사회적 지위 요인	주관적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인식	0.367	34.592***	0.366	34.489***
			세대 내 계층이동성	0.035	3.032**	0.035	3.068**
			세대 간계층이동성	0.068	6.136***	0.068	6.088***
		객관적 사회적 지위	월평균 개인 소득	0.034	3.030**	0.034	3.028**
			월평균 가구 소득	0.009	0.794	0.009	0.799
			주거안정성	0.033	3.208**	0.032	3.184**

		학력	0.041	3.553***	0.041	3.535***
	정부의 질 요인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	-0.001	-0.065	-0.002	-0.200
		정부와 국민 간 소통	0.036	2.969**	0.036	3.010**
		중앙정부 신뢰	-0.002	-0.126	0.000	0.011
		중앙정부 청렴	0.041	2.873**	0.043	2.955**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0.043	-4.054***	-0.049	-4.544***
조절변수	취업기회 공정성		0.068	6.536***	0.071	6.798***
상호작용항	사회적 지위 요인	사회적 지위 인식			-0.019	-1.739*
		세대 내 계층이동성			0.017	1.512
		세대 간계층이동성			-0.010	-0.880
		월평균 개인 소득			0.011	0.936
		월평균 가구 소득			0.006	0.553
		주거안정성			-0.003	-0.270
		학력			-0.006	-0.494
	정부의 질 요인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			-0.004	-0.410
		정부와 국민 간 소통			0.016	1.354
		중앙정부 신뢰			0.015	1.056
		중앙정부 청렴			0.017	1.149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0.026	-2.455*
(상수)			532.535***		508.901***	
R제곱			0.192		0.194	
수정된 R제곱			0.191		0.192	
F값 변화량			150.721***		1.874*	

주 : *p〈.10, **p〈.05, ***p〈.01

4.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서 취업기회 공정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이 정서적 웰빙을 나타내는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시적 측면의 취업기회 공정성이 이들의 관계에 어떤 효과(조절효과)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5). 모형 1에서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사회 지위인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 세대 간 계층이동성과 객관적 사회 지위인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안정성과 학력 및 정부의 질 요인인 중앙정부의 청렴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인 취업기회 공정성 역시 시민들의 행복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질 요인 중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행복에 부(-)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모형 2는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취업기회 공정성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으로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안정성과 학력, 중앙정부의 청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공정성, 취업기회 공정성의 경우 모형1과 동일한 방향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취업기회 공정성과의 상호작용항에서는

세대 내 계층이동성과의 상호작용항이 행복에 대한 정(+)의 효과를 확대한 반면, 사회적 지위 인식,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의 상호작용항은 행복에 대한 정(+)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행복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표 5〉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서 취업기회 공정성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베타	t	베타	t
독립변수	사회적 지위 요인	주관적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인식	0.357	33.538***	0.356	33.457***
			세대 내 계층이동성	0.080	7.043***	0.081	7.105***
			세대 간계층이동성	0.029	2.568*	0.028	2.473*
		객관적 사회적 지위	월평균 개인 소득	0.019	1.674*	0.019	1.673*
			월평균 가구 소득	0.042	3.588***	0.042	3.589***
			주거안정성	0.036	3.508***	0.035	3.458**
			학력	0.043	3.707***	0.043	3.675***
	정부의 질 요인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		0.010	0.956	0.008	0.821
		정부와 국민 간 소통		0.004	0.313	0.004	0.354
		중앙정부 신뢰		-0.004	-0.243	-0.001	-0.102
		중앙정부 청렴		0.029	1.976*	0.029	2.020*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0.020	-1.901*	-0.025	-2.350*
조절변수	취업기회 공정성			0.043	4.086***	0.046	4.331***
상호작용항	사회적 지위 요인	사회적 지위 인식				-0.025	-2.373*
		세대 내 계층이동성				0.019	1.704*
		세대 간계층이동성				-0.010	-0.929
		월평균 개인 소득				0.007	0.662
		월평균 가구 소득				0.003	0.266
		주거안정성				0.009	0.860
		학력				-0.007	-0.612
	정부의 질 요인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				-0.009	-0.881
		정부와 국민 간 소통				0.014	1.209
		중앙정부 신뢰				0.002	0.116
		중앙정부 청렴				0.021	1.420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0.023	-2.201*
(상수)				572.497***		547.328***	
R제곱				0.187		0.189	
수정된 R제곱				0.186		0.187	
F값 변화량				146.045***		1.678*	

주 : *p〈.10, **p〈.05, ***p〈.01

5. 분석적 함의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반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웰빙은 개인·구조·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먼저 사회적 지위 요인 중 주관적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 계층이동성, 세대 간 계층이동성과 객관적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월평균 개인소득, 주거안정성, 학력과 정부의 질 요인 중 중앙정부 청렴이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서열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인식할수록, 개인 또는 자녀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험함을 보여주며, 개인의 경제적 자원, 거주 환경의 안정성, 교육 수준, 정부 청렴성에 대한 인식 등이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손주희, 2018; 김다은 외, 2024; 전영창 외, 2025).

또한 객관적 사회적 지위 요인인 월평균 가구소득은 정서적 웰빙인 행복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정부의 질 요인인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은 인지적 평가 측면인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족 단위의 경제적 자원이 즐거움과 평온함 등 정서적 측면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의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성 등은 시민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배정현, 2014; 김이수, 2024).

그리고 정부의 질 요인인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시민은 학습비용, 심리적 비용, 규칙 준수비용 등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복잡한 절차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주관적 웰빙이 축소됨을 나타낸다(Herd & Moynihan, 2018). 즉, 신공공관리론(Hood, 1991)의 표준화된 절차는 시민에게 시간적·인지적 부담을 과도하게 유발하면서 역설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이 제도나 정책의 결과에 대해 더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면서 주관적 웰빙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상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현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족과 정서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Tyler & Blader, 2003).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관적 웰빙 연구들이 기대-현실 간 불일치가 삶의 만족도 하락과 밀접하게 관련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iener, Lucas & Oishi, 2018).

둘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설정된 공정성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즉 사회적 공정성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법 등 사회 시스템 전반적으로 기회, 절차 등이 공정하게 제공된다면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인 정서가 커짐을 보여준다(Helliwell & Putnam, 2004; Rothstein & Uslaner, 2005). 그리고 취업기회 공정성 역시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능력, 자격, 노력 등에 기반하여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채용, 승진 등이 차별없이 투명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강화되는 등 삶과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과 감정이 증대됨을 나타낸다.

셋째, 조절효과의 결과로서 사회적 공정성은 학력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부와 국민간 소통과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에, 주거안정성과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 경제, 사법 등 사회 전반적인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공정성은 학업수준을 공정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학력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력이 주관적 웰빙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강화한다. 그 외에도 사회 시스템 전반이 차별없이 공정한 절차 속에 운영된다면 정부-국민간 소통 기회도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보장되는 등 국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되면서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은 주거환경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부동산 정책 등)과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자산 축적과 거주 환경이 즐거움 등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함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적 공정성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정성 인식이 절차의 효용과 제도 전반적인 신뢰를 높여 상대적 박탈 및 지위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지만, 이미 확보된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효용이 체감되어 추가적 웰빙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Helliwell & Putnam, 2004; Kahneman & Deaton, 2010). 그 외 세대 내 계층이동성 및 정부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도 사회적 공정성과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공정한 절차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이미 높아져 삶의 만족에 대한 계층이동성 기대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거나(Frey & Stutzer, 2005; Lind & Tyler, 1988), 정부 업무에 대한 정치효능감이 주는 추가 보상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Helliwell & Putnam, 2004; Frey & Stutzer, 2005).

넷째, 조절효과의 결과로서 취업기회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인식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동시장이 공정한 환경일수록 성과를 개인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커지고, 사회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기대수준이 높아 원하는 기준에 쉽게 못 미치면서, 기대-불일치로 인해 삶의 만족이 축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andel, 2020). 그리고 취업기회 공정성은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취업 과정에서도 증빙서류 준비, 자격 심사 절차 수행 등 행정적 부담이 커져 시간·금전적 비용이 증가하고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Herd & Moynihan, 2018).

또한 취업기회 공정성은 세대 내 계층이동성과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균등한 기회 및 차별없는 보상체계가 보장된다면 능력·노력기반의 평가 및 보상이 기대되므로 세대 내 계층이동성에 대한 예측성이 높아지고 평온·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 강도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공정성이 제도·사회적 맥락 변수로서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완충·증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이경호, 2021; 박창연·이충기, 2020)의 설명을 지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공정성은 일부 요인들과 상호작용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긴장 등을 유발하여 주관적 웰빙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과 차별성을 지닌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소가설	검증결과
사회적 지위 요인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 요인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용
	주관적 사회적 지위 요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용
	객관적 사회적 지위 요인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객관적 사회적 지위 요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용
정부의 질 요인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질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정부의 질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사회적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정부의 질 요인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사회적 공정성은 정부의 질 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사회적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사회적 공정성은 정부의 질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취업기회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정부의 질 요인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취업기회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취업기회 공정성은 정부의 질 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취업기회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취업기회 공정성은 정부의 질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이 나타내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과 행복은 사회적 지위 인식, 세대 내·세대 간 이동성 인식, 개인소득, 주거안정성, 학력, 중앙정부 청렴도, 사회적 공정성, 취업기회 공정성에 의해 증가하였고,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 인식에 의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위, 정부의 질 및 주관적 웰빙의 관계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에 의해 변화되었다. 특히 사회적 지위 및 정부의 질과 공정성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긍정적 조합(학력과 사회적 공정성, 정부와 국민간 소통과 사회적 공정성, 주거안정성과 사회적 공정성, 세대 내 계층이동성과 취업기회 공정성)과 부정적 조합(세대 내 계층이동성과 사회적 공정성, 가구소득과 사회적 공정성, 정부효능감과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지위 인식과 취업기회 공정성,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으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계층 간 이동 기회 확대, 생활 안정성 강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전략의 수립이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사회적 지위, 세대 내·세대 간 이동성, 개인소득, 주거안정성, 학력이 주관적 웰빙과 일관되게 정(+)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정책적 초점을 '사회적 지위 인식 제고-계층간 이동기회 확대-생활기반 안정'의 삼각축으로 정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와 사회공헌에 대한 공식적 인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계층 간 이동 기회 확대를 위해 장학 프

로그램, 마이크로 자격증, 전환교육 등의 확대로 실질적인 계층 이동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활 안정성 차원에서 소득역량 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과 지역기반 일자리사업), 소득안정화 제도(근로장려세제, 소득보험, 실업부조 등), 주거안정화 정책(장기공공임대, 공공모기지 제도, 강제퇴거 예방)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생활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금융·건강 관련 리터러시를 포함한 전 생애학습권을 확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렴성과 소통을 기반으로 공정한 행정 운영 및 시민 중심적 절차 설계이다. 본 연구에서 중앙정부 청렴성과 정부-국민 간 소통이 주관적 웰빙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행정기관 업무수행 공정성 인식이 주관적 웰빙에 부(-)의 효과를 나타낸 것은 공정성의 내용 뿐 아니라 업무상 구현방식이 주관적 웰빙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올바른 행정과 편리한 행정을 함께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고도화하며, 소통 기반의 공정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상시적 쌍방향 소통 체계(시민패널, 민원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여 제도 신뢰와 절차적 효용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시민 친화적인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공정성을 구현하는 과정에 행정부담(과도한 증빙서류 준비, 심사과정 등 대기시간 소요)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표준양식 마련, 친절한 안내 등 접근용이성 증대,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옴부즈만 제도 구비 등 인간중심의 행정업무를 설계하여 '공정성-이용자 용이성'간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한 기회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금전적인 인프라의 확충이다. 본 연구에서 공정성은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소득 및 사회적 지위 인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한계효용을 약화)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는 공정성 확대시 '성과 책임을 개인에게 부여'함에 따른 지위불안과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과 승진 심사시 역량과 성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면서, 심리치료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실패 허용, 재도전 기회 제공 등 성과 달성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원, 문화 자원 등 여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계망 강화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허브 등 비물질적 복지 경로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정책관리와 지역맞춤형 정책 설계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은 유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공정성과의 상호작용 효과(조절효과)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관적 웰빙 정책에서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생활기반 안정(소득과 주거)과 긍정적인 정서 증진(여가, 문화, 관계)을 함께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통합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두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웰빙 대시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일-여가-주거 균형 지수'를 점검함으로써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수도권 대도시에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공공임대+취업연계)와 심리건강 지원센터를, 지방 중소도시에 '일자리-교육-정주 생태계'(대학-기업 연계, 귀농귀

촌 지원)를, 농어촌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경로당 프로그램, 이동 문화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에 기반하여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한 바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 차원에서 인과성과 변동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위, 정부의 질, 공정성은 다차원적 개념이지만, 본 연구는 이를 일부 문항 또는 단일 지표로 측정한 바, 향후 연구에서 다차원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변수의 개념과 해석력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을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구조적·제도적 요인들(사회적 지위, 정부의 질, 공정성)에 두고, 객관적 사회적 지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일부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제변수의 불포함으로 독립변수들의 순수효과(net effect) 추정에 한계가 존재하는바, 향후 연구는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우진. (2020).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 OECD 6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제도신뢰의 영향력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 23(1): 139-165.

김다은·한현섭·김희원·이초원·유민서·윤이재·조혜린·이화령·신지은. (2024).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환경 내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 효과.「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8(2): 89-110.

김이수. (2024). 정부 및 지역 요인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공정성과 능력주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자치행정학보」, 38(4): 169-190.

문정화·강민아. (2017). 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수준, 건강수준의 조절효과.「사회복지정책」, 44(1): 79-103.

박창연·이충기. (2020).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직업불안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9(8): 43-57.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행정논총」, 52(1): 247-270.

손주희·이명진. (2018). 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논총」, 34(1): 43-71.

이경호. (2021). 신뢰와 삶의 만족에 있어 사회적 포용성의 보편적 측면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위 인식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GRI연구논총」, 23(1): 27-50.

이형하. (2021).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11): 377-389.

전영창·최성언·강다은. (2025).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84: 35-65.

최예나. (2023).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구-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7(3): 183-214.

한국행정연구원. (2024). 「2024년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 연구보고서.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Alesina, A., & La Ferrara, E.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897-931.

Barro, R. J. (2001). Human Capital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2-17.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Canel, M. J., & Sanders, K. (2012). Government Communication: An Emerging Field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In Margaret Scammell & Holli A. Semetko(eds.), *The Sage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85-96. London: Sage.

Chetty, R., Hendren, N., Kline, P., & Saez, E. (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4): 1553-1623.

Clark, A. E. (2011). Worker Well-Being in Booms and Busts. In Paul Gregg & Jonathan Wadsworth(eds.), *The Labour Market in Winter: The State of Working Britain,* 128-14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18). Advances and Open Questions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Collabra: Psychology,* 4(1):1-49.

Dipasquale, D., & Glaeser, E. L. (1999). Incentives and Social Capital: Are Homeowners Better Citizen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5(2): 354-384.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ul A. David & Melvin W. Rede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Eccles, J. S., & Wigfield, A. (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09-132.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Frey, B. S., & Stutzer, A. (2005). Beyond Outcomes: Measuring Procedural Utility. *Oxford Economic Papers,* 57(1): 90-111.

Goldthorpe, J. H. (1980).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Press.

Helliwell, J. F., & Huang, H.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59(1449): 1435-1446.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7).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Eastern Economic Journal,* 33(1): 1-19.

Herd, P., & Moynihan, D. P. (2018). *Administrative Burden: Policymaking by Other Mea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Hood, C. (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3-19.

ILO. (2019).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9.*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263-291.

Keese, M. (2012). Who Feels Constrained by High Debt Burdens?. Subjective vs. Objective Measures of Household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1): 125-141.

Klitgaard, R.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rieger, N., Williams, D. R., & Moss, N. E. (1997). Measuring Social Class in US Public Health Research: Concepts, Methodologies, and Guidelin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8(1): 341-378.

Lind, E. A., & Tyler, T.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Press.

Liu, D., Baumeister, R. F., Yang, C. C., & Hu, B. (2019). Digital Communication Media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4(5): 259-274.

Ma, Y., Ma, B., Yu, L., Ma, M., & Dong, Y. (2024). Perceived Social Fairness and Trust in Government Serially Mediate the Effect of Governance Quality on Subjective Well-Being. *Scientific Reports*, 14(1): 1-12.

Niemi, R. G., Craig, S. C., & Mattei, F. (1991). Measuring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1988 National Elect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1407-1413.

Oishi, S., Kesebir, S., & Diener, E. (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9): 1095-1100.

Oreopoulos, P., & Salvanes, K. G. (2011). Priceless: The Nonpecuniary Benefits of School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1): 159-184.

Persson, A., Rothstein, B., & Teorell, J. (2013). Why Anticorruption Reforms Fail—Systemic Corruption as a Collective Action Problem. *Governance,* 26(3): 449-471.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Rothstein, B., & Stolle, 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Rothstein, B., & Teorell, J. (2008).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Government Institutions. *Governance,* 21(2): 165-190.

Rothstein, B., &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41-72.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Century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Smith, H. J., Pettigrew, T. F., Pippin, G. M., & Bialosiewicz, S. (2012). Relative Deprivation: A Theoretical and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203-232.

Tyler, T. R. (2006).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Tyler, T. R., & Blader, S. L. (2003). The Group Engagement Model: Procedur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Cooperat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4):349-361.

Weber, M. (1922/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eber, M. (1946). Class, Status, Party. In Hans H. Gerth &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180-19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최예나(崔睿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논문제목: 계약관리요인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2015)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관리(민간위탁), 복지정책, 지방행정 등이며, 연구로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주민과 선출직 기관들 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16)', '의료서비스 분야의 편의적 선취(cream-skimming)에 관한 예비적 고찰(2012, 공저)' 등이 있다(luckpink@naver.com).

〈논문접수일: 2025. 8. 27 / 심사개시일: 2025. 9. 4 / 심사완료일: 2025. 11. 9〉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Status and Government Quality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Fairness

Choi, Yen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social status and government qualit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irness. The analysis reveals that social status (subjective social status, individual income, housing stability, education level) and government quality (central government integrity) as well as fairness (social fairness, employment opportunity fairness) enhanc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By contrast,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administrative agencies' performance was found to diminish them. Additionally, fairness (social fairness and employment opportunity fairness) interacted with certain variables (education level, government-citizen communication, household income, government efficacy, etc.) to induce changes in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an integrated policy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individual social status, expand opportunities for inter-class mobility, and reinforce life stability. Second, administrative governance must be conducted fairly, grounded in integrity and transparent communication, while procedures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a citizen-centered orientation. Third, policies should guarantee equitable opportunities,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expand non-monetary infrastructures that contribute to a higher quality of life. Finally, an integrated polic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enhanc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ccompanied by region-specific policy designs.

Key Words: subjective well-being, social status, quality of government, fairness, life satisfaction